

# 더민주 비준론 카드로 ‘사드 출구 찾기’

### 이상호 “거대 예산·불투명한 과정 국회서 다뤄야”

### 文 SNS로 지지 의견...당론 채택엔 논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론’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간 반대도 찬성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국회 비준’을 고리로 입장 정리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여기에 당내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까지 비준동의론을 역설하고 나서고 있어 사드 국회 비준론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사드 찬반 문제를 넘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원론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공식적으로 비준론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사드에 대해 당내에는 반대 당론 채택부터 국회 비준, 입장 표명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럼에도, 당 지

도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가 비준론 카드를 내민 것은 국공유지였던 성산포대 일대에서 사유지인 성주골프장으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당연히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우 원내대표의 논리다. 여기에 정부의 롯데그룹 소유 골프장 헐값 매입 등 비정상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우 원내대표의 시각이다.

우 원내대표는 10일 “부지 조성 등 사드 배치 준비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며 “1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과정이 모두 편법, 비정상적

고 투명하지 않으니 국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국회 비준동의론이 사드 배치 반대론으로 이어지는 인식을 경계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 문제 제기가 사드 문제 반대로 비칠까 조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 진행절차 중단과 동시에 외교적 노력을 제안한 문재인 전 대표의 시각과도 궤를 같이한다. 문 전 대표는 전날 SNS에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합의를 반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재검토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우 원내대표의 비준론 카드가 더민주의 사드 입장에 대한 출구 모색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추미애 당 대표가 개인적 소신을 전제로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

히 한 상황에서 당은 전문가 토론 등으로 출구를 찾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드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탈피해 국회 비준을 매개체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의 비합리적인 진행절차를 이산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비준 동의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부결시키기 위해 비준안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관련 주장에 대해 “명색이 대선 주자라는 분의 안보인식과 현실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북한 군부대 이렇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3野 ‘박지원 간첩 비유’ 김진태 윤리위 제소

### 김진태 “맞고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이 10일 공동으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했다.

야권 3당이 특정 정치인을 공동으로 제소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김 의원이 최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간첩’에 비유한 것은 물론 신체적 약점을 비하하는 등 정치인으로서 금도를 넘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안은 야당 의원들 163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박지원 위원장을 겨냥해 “뇌 주파수가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박 위원장에게 “이적행위를 멈추라”며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 권터 기움은 간첩

이었다.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간첩에 빗대기도 했다.

이에 박 위원장과 국민의당이 “한국판 매카시”라고 비판하자,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박지원을 간첩이라고 지칭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런 모양이다. 하긴 왜곡과 선동으로 눈이 빼놓아졌는데 뭘 제대로 보아줬나”라고 비난, 야권의 공분을 샀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야권 3당의 윤리위 제소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지원 의원을 맞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박지원 의원을 간첩으로 지칭한 적도 없는데 과민반응”이라고 밝혔으며 신체 비하 논란에 대해서도 “왜곡과 선동으로 시각이 빼놓아졌다는 점을 지적했지 물리적 신체 부위를 의미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정진석, 다시 개헌론 띄우기

### “논의 인위적으로 못 막아”...여권내 공론화 주목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나서겠다고 하면 계속 거부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개헌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힌 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처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다만 국회 내의 개헌 논의는 그들의 논의로 비치면 실질적인 논의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주도할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대통령중심제의 한계가 왔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든 것은 여권 내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등 당면한 숙제가 산적하고 안보위기·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는 이날 청와대에서 “지금의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지만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려두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그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대해 “각계각층의 민의를 먼저 수렴해야 한다.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공론으로서의 개헌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 “해양 주권행사 나서야”...야 “해적 다름없는 中 어선 엄벌을”

### ‘해경단정 침몰’

### 강경 대응 한목소리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10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당국은 도주한 중국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의법조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 해경만 ‘무기 사용 자체’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한 건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서해 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과 장비 보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관용을 보일 때가 지났다”며 “정부는 해양 주권 수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정당하게 주권 행사를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여기에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도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국력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



손 잡은 여야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새누리당 정진석(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상호(맨 오른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에 참석,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금이라도 고속단정 침몰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원내대표는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어선의 폭력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가히 어선이 아니라 해적이라고 규정한다”며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

압할 수 있다. 군을 투입, 군과 해경이 공동작전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들조차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중국 당국에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의 총동 공격을 받아 침몰한 것과 관련,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영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합의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더민주, 국민 아이디어 구매 ‘예산마켓’ 오픈

### 16일까지 제안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일반 국민으로부터 정책·예산 관련 아이디어를 구매하는 ‘국민예산마켓’을 오픈했다.

더민주가 이날부터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정책·예산 관련 제안을 공모한다. 접수된 제안들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아울러 추미애 대표와 이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

책위 의장, 김태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등이 제안자들과 간담회도 연다.

더민주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2017년 새해 예산안’이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추 대표의 공약 중 하나였던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오프 네트워크’ 구축과도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